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목 차

■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	3
3. 시사점	8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정 민 연 구 위 원 (2072-6220, chungm@hri.co.kr)

 백 다 미 선 임 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

Executive Summary

□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 개 요

세계 신문협회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저널리즘 이슈로 '가짜 뉴스(Fake news)의 확산'을 선정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가짜 뉴스를 사실정보지 형태가 아닌, 기성 언론사 뉴스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실제 언론보도인 양 허위로 유포되는 정보로 경찰청이 발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가짜 뉴스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짜 뉴스는 미국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크게 이슈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내에서도 사실 정보지, 낚시 뉴스 등이 개인, 기업 등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언론 조정에 대한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명예 훼손 비중이 약 95%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향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가짜 뉴스의 확산은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가짜 뉴스에 대한 가정) 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인터넷 언론 백서'에 따르면, 6개월 간 조사대상 208개 매체 전체의 총 기사 수는 650만 건이 넘는다. 이를 일별로 환산하면 우리가 하루에 접하는 평균 기사 수는 35,948개에 달한다.

가짜 뉴스의 실제 건수를 추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자료의 한계로 어렵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만약 가짜 뉴스 건수가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현재 유통되는 기사 중 1%가 가짜 뉴스라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기사 대상에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복지, 국제, 과학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 중 가짜 뉴스의 대상은 연예인/운동선수(문화 및 스포츠 기사), 기업(산업 기사), 정치인(정치 기사), 일반인(사회 기사)에 국한된다고 가정하고, 이 분야의 기사 수를 기준으로 가짜 뉴스의 유형별 비율을 가정하였다.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규모 추정 방법) 가짜 뉴스에 의한 경제적 비용은 크게 당사자의 피해 금액과 사회적 피해 금액으로 구분된다. 첫째, 피해 당사자를 크게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하면 가짜 뉴스 유포 시 개인에게는 정신적·경제적 피해, 기업에게는 영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에 대한 가짜 뉴스 유포에 따라 정신적 피로, 사회 활동 제약, 명예훼손 등으로 사회·경제활동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가짜 뉴스 유포에 따른 개인의 피해 기간이 1달 가량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월 평균 소득을 개인의 피해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가

짜 뉴스 유포 기간 동안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포 기간은 1일로 가정할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업의 피해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피해 금액의 경우 가짜 뉴스의 제작 및 유포는 가짜 뉴스 당사자에 발생하는 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형법에 적시된 형량을 통해 사회적 피해를 판단했다고 보고 이를 사회적 피해 금액 추정의 근거로 사용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따르면 가짜 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내용의 진위 여부를 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량 금액을 실제 선고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가짜 뉴스 1건 당 사회적 피해 금액을 추정하였다.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규모 추정 결과) 가짜 뉴스의 실제 건수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가짜 뉴스 건수가 만약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하고 경제적 비용 추정을 추정한 결과, 가짜 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당사자 피해 금액 22조 7,700억 원과 사회적 피해 금액 7조 3,200억 원을 합한 연간 약 30조 900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 명목 GDP(2015년 1,559조 원)의 약 1.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 >

구 분		피해 금액
당사자 피해 금액	개인	5,400억 원
	기업	22조 2,300억 원
	사회적 피해 금액	7조 3,200억 원
합계		30조 900억 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가짜 뉴스 확대는 사회적 신뢰 저하, 정치적 집단 극화, 극단주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개인 및 기업 등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짜 뉴스 같은 거짓 정보의 유통 및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철저한 팩트 체크(Fact Checking) 시스템의 활성화로 뉴스의 ‘가짜’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셋째, 정부, 기업, 언론 등의 분야에서의 정보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이 가짜 뉴스를 차단하는 근원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넷째, 자유에는 항상 책임감이 따른다는 선진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1. 개 요

○ 세계 신문협회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할 저널리즘 이슈로 '가짜 뉴스(Fake news)의 확산'을 선정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

- 가짜 뉴스(Fake News)의 정의

- 내외신 종합에 따르면, 가짜 뉴스는 상업적 또는 정치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전통적인 뉴스 매체 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거짓 정보(Hoax) 또는 의도적 잘못된 정보로 정의
- 국내 언론에 따르면, 가짜 뉴스를 사실정보지 형태가 아닌, 기성 언론사 뉴스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실제 언론보도인 양 허위로 유포되는 정보로 경찰청이 발표했다고 보도함

- 최근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가짜 뉴스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뉴스들이 확산되면서 선거여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음
- 인터넷, SNS으로 유통된 가짜 뉴스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기여했다는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미국 페이스북과 구글의 최고경영자(CEO)들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

- 미국의 인터넷 뉴스 매체 버즈피드(BuzzFeed)의 분석에 따르면 전통미디어보다 페이스북의 영향력이 크다고 발표¹⁾

- 페이스북을 통해 유통된 상위 50개 뉴스 중 23개가 미국 정치 관련 이슈이며, 이에 따라 정치관련 가짜 뉴스 공유 및 댓글 수는 1,060만 건으로 전체 2,150만 건의 49.3%를 차지

1) 대선기간 중 가짜 뉴스 20개의 페이스북 공유 및 반응 댓글수는 871만 건으로 CNN, 뉴욕타임즈 등 주요 전통 미디어의 가장 호응이 높았던 대선 뉴스 20개의 736만 건의 반응을 넘어섬, Craig Silverman, "This Analysis Shows How Fake Election News Stroies Outperformed Real news on facebook" BuzzFeed News, 2016.11.17.

< 페이스북으로 유통된 2016년 정치 관련 상위 5대 가짜 뉴스 >

순위	뉴스 제목	매체 이름	공유, 댓글수 (만 건)
1	학교에서 국민의례 금지에 대한 오바마 행정명령 성명	ABC News	217.7
2	프란치스코 교황, 트럼프 지지한다고 선언	Ending the Fed	96.1
3	미국을 떠나는 사람에게 멕시코, 아프리카 행 편도 항공권 제공	Tmzhiphop	80.2
4	힐러리의 이메일을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FBI 요원이 시체로 발견	Denver Guardian	56.7
5	반트럼프 음반 출시 위해 밴드 레이저 어게인스트 더 머신 재결성	Heaviermetal.net	56.0

자료 : Buzzfee.

○ 가짜 뉴스는 미국 이외에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크게 이슈화될 가능성이 큼

- 국내에서도 사실 정보지, 낚시 뉴스 등이 개인, 기업 등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등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 국내에도 최근 언론 조정에 대한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침해 유형별로는 명예 훼손 비중이 가장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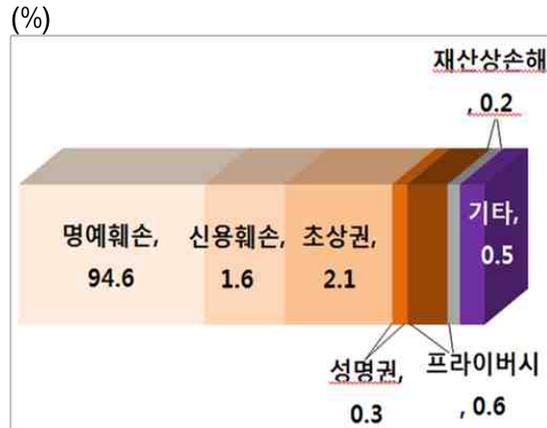
- 연간 언론 조정신청 건수를 보면 1990년에 159건에 불과 했으나, 2015년 5227건으로 약 33배 증가
- 특히,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이들 관련 뉴스에 대한 언론 조정 건수가 급격히 증가
- 언론 조정 청구건수를 누적으로 보면, 명예훼손 비중이 95%에 이르면서 대부분을 차지

< 언론 조정 청구 건수 추이 >



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 침해유형별 조정 청구 비중 >



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주 : 1990~2015년까지 누적 건수를 비중으로 계산.

- 더욱이 향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가짜 뉴스의 확산은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
 - 2017년 3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허위 사실공표·후보자 등 비방 등의 내용이 담긴 약 4,662건의 기사를 삭제 요청했다고 밝힘
 - 가짜 뉴스는 잘못된 여론 형성, 개개인의 의사 결정의 혼동, 민주주의 사회의 붕괴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

2.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

1) 가짜 뉴스에 대한 가정

○ 연간 기사 현황 및 가짜 뉴스에 대한 가정

- 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인터넷 언론 백서'에 따르면, 6개월간 조사대상 208개 매체 전체의 총 기사 수는 6,542,481개임
 - 상위 약 10%에 해당하는 21개 매체가 전체 기사의 절반 가까이(3,139,845개)를 차지
 - 매체당 평균 기사 수는 31,454개, 일 평균 기사 수²⁾는 35,948개, 매체당 일 평균 기사 수는 173개
- 가짜 뉴스의 실제 건수를 추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자료의 한계로 어렵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만약 가짜 뉴스 건수가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
 - 이는 현재 유통되는 기사 중 1%가 가짜 뉴스라는 의미가 아님
- 따라서 만약 가짜 뉴스가 13만 건 정도 유통이 된다는 가정 하에 경제적 비용을 추정함
 - 가짜 뉴스에 대한 논의가 이제 초기 단계이므로 가짜 뉴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
 - 또한 가짜 뉴스의 유형별 개수에 대한 가정을 위해 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인터넷 언론 백서' 자료 중 지면 별 기사 수 자료를 참고
 - 즉, 기사 대상에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복지, 국제, 과학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 중 가짜 뉴스의 대상은 연예인/운동선수(문화 및 스포츠 기사), 기업(산업 기사), 정치인(정치 기사), 일반인(사회 기사)에 국한된다고 가정하고, 이 분야의 기사 수를 기준으로 가짜 뉴스의 유형별 비율을 가정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총 182일로 전체 기사를 나눔.

< 연간 가짜 기사 수 추정 >

기사 대상	건 수(A)	비율
연예인/운동선수	41,500	31.9%
기업	40,000	30.7%
정치인	32,300	24.9%
일반인	16,200	12.4%
Total	130,000	

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진흥재단, 『2016년 인터넷 언론 백서』 등의 자료를 인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계산.

2)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규모 추정

○ 가짜 뉴스에 의한 경제적 비용은 크게 1) 당사자의 피해 금액 2) 사회적 피해 금액으로 구분

① 가짜 뉴스 당사자의 피해 금액 : 약 22조 7,700억 원

- 피해 당사자를 크게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하면, 가짜 뉴스 유포 시 개인에게는 정신적·경제적 피해, 기업에게는 영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의 정신적·경제적 피해와 기업의 영업 피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추정

가. 개인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약 5,400억 원

- 개인은 자신에 대한 가짜 뉴스 유포에 따라 정신적 피로, 사회 활동 제약, 명예훼손 등으로 사회·경제활동 위축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짜 뉴스 유포에 따른 개인의 피해 기간이 1달 가량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월 평균 소득을 개인의 피해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연예인/운동선수, 정치인, 일반인 등 대상별 가짜 뉴스 개수와 대상별 월 평균 소득을 곱하여 개인의 피해 금액 추정이 가능
 - 연예인/운동선수와 일반인의 월 평균소득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2015년 자료로 활용3)
 - 정치인의 월 평균소득은 현행 제 20대 국회의원 보수 지급 기준 자료를 통해 활용4)
 - 연예인/운동선수, 정치인, 일반인의 대상별 피해 금액은 가짜 뉴스 건수를 대상 월평균 소득으로 곱해서 환산

< 개인의 정신적 피해액 추정 >

구 분	건수(A)	1달 평균 소득(B) (만원)	피해액(A*B) (억원)
연예인/운동선수	41,500	299	1,240
정치인	32,300	1,150	3,720
일반인	16,200	274	440
계		-	약 5,400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개인은 연예인/운동선수, 정치인, 일반인으로 한정하며, 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 추정.

3) 연예인/운동선수의 월 평균 소득은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중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상용임금총액을 적용.

4) 국회사무처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의 20대 국회에서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 및 월 평균금액 참고.

나. 기업의 영업 피해: 약 22조 2,300억 원

- 기업은 가짜 뉴스 유포 기간 동안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포 기간은 1일로 가정할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업의 피해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각 상장기업(KOSPI & KOSDAQ)의 2016년 연간 매출을 영업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여 중간값을 적용

< 기업의 영업 피해액 추정 >

구 분	가짜 뉴스 건수 (C)	상장기업 1일 평균 매출액(D) (억원)	상장기업 1일 평균 매출액 (C*D) (억원)
기업 관련	40,000	5.6	222,300

자료 : Bloomberg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② 사회적 피해 금액 : 약 7조 3,200억 원

- 가짜 뉴스의 제작 및 유포는 가짜 뉴스 당사자에 발생하는 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즉, 법원이 형법에 적시된 형량을 통해 사회적 피해를 판단했다고 보고 이를 피해 금액 추정에 적용
 - 가짜 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내용의 진위 여부를 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가짜 뉴스는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0조에 근거,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엄하게 처벌됨
 -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 형량 : 벌금형: 사실 유포시 최대 3천만원,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5천만원, 징역형: 사실 유포시 최대 3년,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7년⁵⁾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0조.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가짜 뉴스 내용의 사실 유무를 구분하여 피해 금액을 추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평균적으로 벌금형은 최대 4천만원, 징역형은 최대 5년의 형량으로 가정
 -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량 금액을 선고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가짜 뉴스 1건당 사회적 피해 금액을 추정
 - 우선, 벌금형은 평균 4천만원, 징역형은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5년으로 형량을 금액으로 환산
 -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 비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재산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수를 통해 계산
 - 즉,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은 697건(86.9%), 징역형은 105건(13.1%)이 선고됨
 - 가짜 뉴스 1건당 사회적 피해 금액 : 약 5천 6백만원
 = 4천만원 × 86.9% +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5년) × 13.1%
 - 연간 가짜 뉴스의 사회적 피해 금액 : 약 7조 3,200억원
 = 연간 가짜 뉴스 건수 × 가짜 뉴스 1건당 사회적 피해 금액

< 사회의 신뢰 훼손 비용 추정 >

구분	가짜 뉴스 건수 (F)	벌금 혹은 징역형 평균 금액 (G) (만원)	사회적 비용 (F*G) (억원)
사회적 영향	130,000	5,600	73,200

자료 : 대법원,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단, 최대 형량을 가정하여 추정했기 때문에 실제 판결에 내려진 형량 대비 과대 추정 가능성이 존재.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 가짜 뉴스의 실제 건수를 추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가짜 뉴스 건수가 만약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하고 경제적 비용 추정
- 가짜 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당사자 피해 금액 22조 7,700억 원과 사회적 피해 금액 7조 3,200억 원을 합한 연간 약 30조 900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연간 경제적 비용 30조 900억 원은 명목 GDP (2015년 1,559조 원)의 1.9%에 해당하는 수준

<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 >

구 분		피해 금액
당사자 피해 금액	개인	5,400억 원
	기업	22조 2,300억 원
	사회적 피해 금액	7조 3,200억 원
합계		30조 900억 원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3. 시사점

- 가짜 뉴스 확대는 사회적 신뢰 저하, 정치적 집단 극화, 극단주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개인 및 기업 등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

첫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짜 뉴스 같은 거짓 정보의 유통 및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명확한 가짜 뉴스의 정의와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처벌 규정 등이 필요
- 법으로 규제할 경우 검증이라는 언론 본연의 활동 위축, 언론 통제 등에 관한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

둘째, 철저한 팩트 체크(Fact Checking) 시스템의 활성화로 뉴스의 '가짜'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 정부와 포털 기업간 공동 대응이 가능한 협업적 팩트 체크 시스템 도입 및 강화가 필요
- 언론사와 포털차원의 뉴스 공급 측면에서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도입

셋째, 정부, 기업, 언론 등의 분야에서의 정보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이 가짜 뉴스를 차단하는 근원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 정부와 민간 간에 소통이 부족하고 적절한 시점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언론의 신뢰성이 부족할 때 가짜 뉴스는 성행할 것임

넷째, 자유에는 항상 책임감이 따른다는 선진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으나 가짜 뉴스를 통해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등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염두 **HRI**

정 민 연구위원 (2072-6220, chungm@hri.co.kr)

백 다 미 선임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